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에 관한 OECD 설문 조사결과(Initial Findings)

- 제36차 Public Government Committee 회의('07.10.16~17)에서 발표 -

1. 검토배경 및 방법론

- '05. 11월 로테르담에서 열린 Public Governance Committee 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이 참여국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인식되어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 프로젝트 착수
- '07년 봄에 각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사례연구 실시
 - * 대상국가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한국,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등 25개국

※ 용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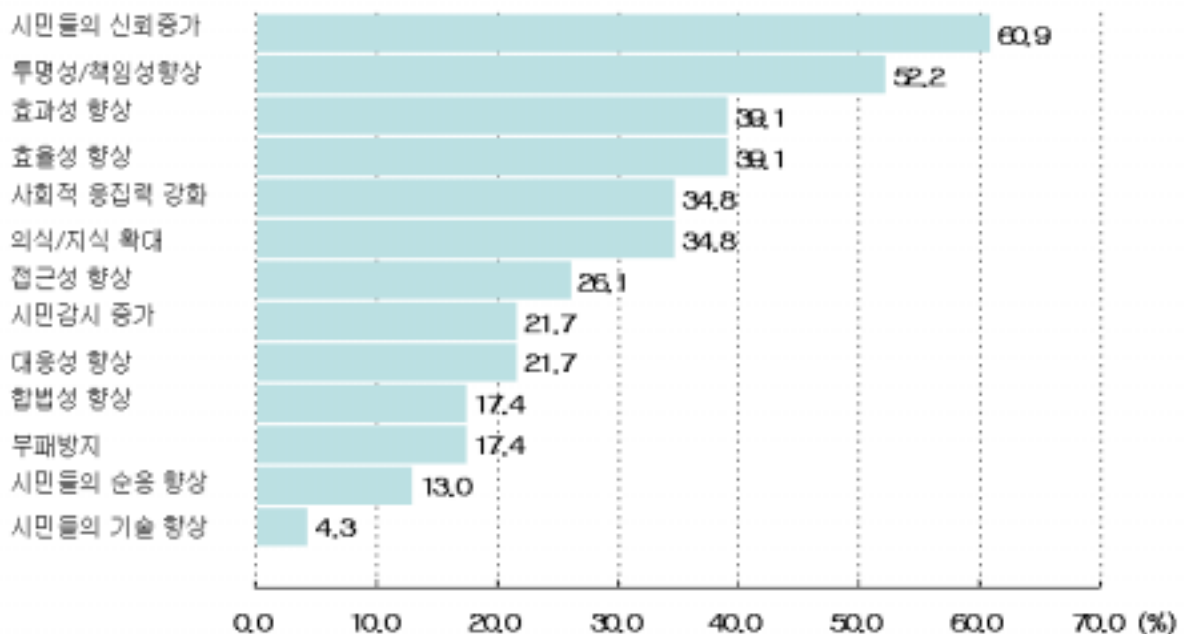
- 정책결정(Policy Making): 모든 단계의 정책 사이클 포함 (의제설정, 정책준비, 의사결정, 집행 및 평가)
- 공개적(Open):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접근용이성 및 대응성을 의미
- 포괄적(Inclusive): 모든 시민들은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

2. 설문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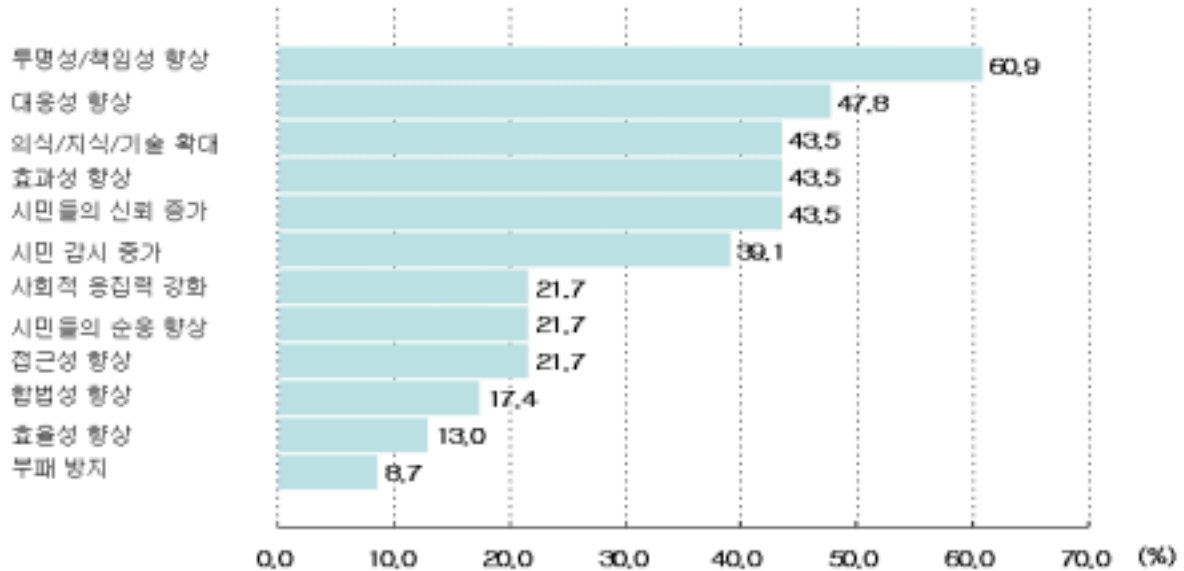
① 정부가 시민들을 서비스 전달과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이유

- 시민참여의 효과 : 더 나은 정책결과,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 정책 순응 등을 이끌어 냄
- 설문내용 : 정부는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지,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까지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
 - * 목표 : 시민들의 신뢰증가, 투명성/신뢰성 향상, 효율성 향상, 능률 향상, 사회적 응집력 강화, 대응성 향상, 합법성 향상 등

①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중요 또는 매우 중요로 응답한 비율)



②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달성한 목표(중요 또는 매우 중요로 응답한 비율)



< 그래프 해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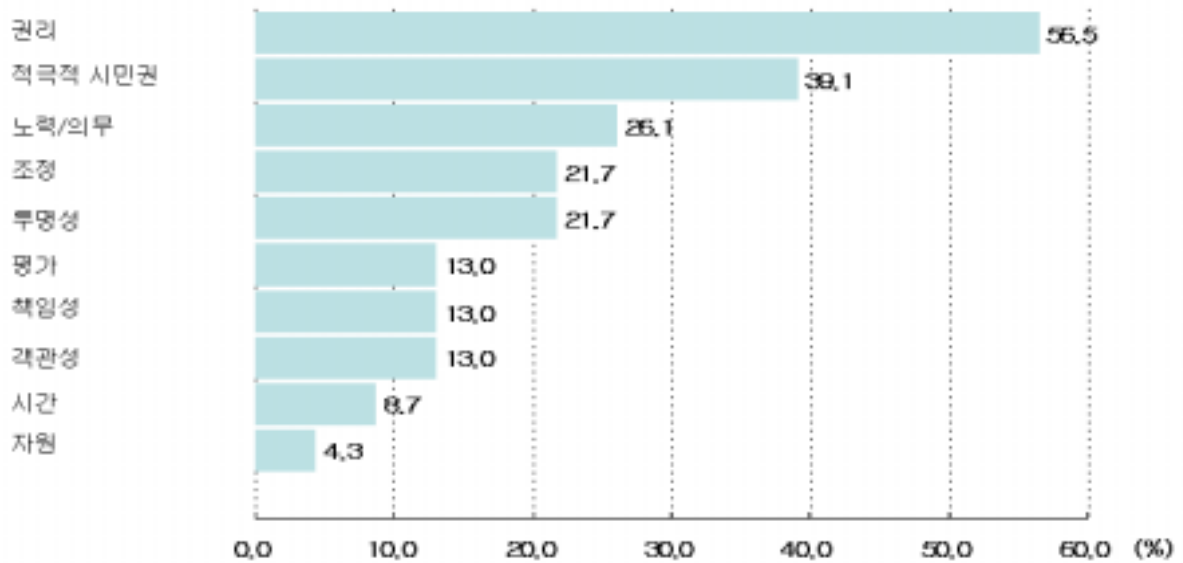
-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증진’ : 가장 중요한 목표(60.9%)였지만 세 번째 중요한 성과(43.5%)로 나타남
- ‘효율성 향상’ : 상대적으로 중요한 목표(39.1%)였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성과(13%)로 나타남
- ‘사회적 응집력 강화’ : 일부 국가들(34.8%)은 아주 중요 또는 중요한 목표로 인식했지만 보다 많은 국가들(52.2%)은 낮게 평가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

② 정부가 시민참여를 이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 및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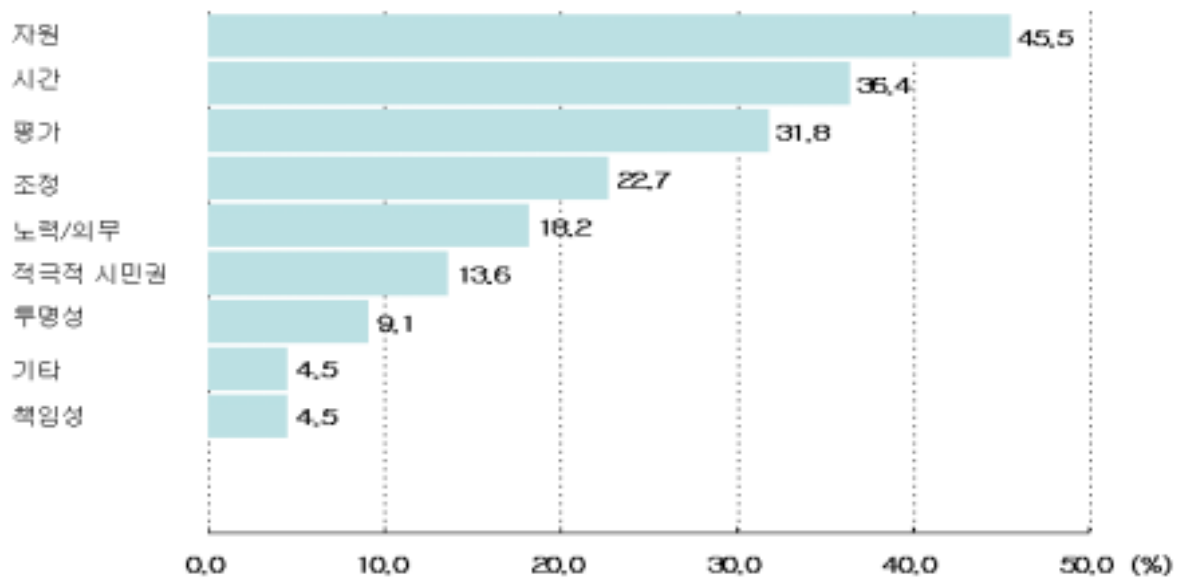
- ‘01년 OECD에서 만든 “성공적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및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에 대한 10대 원칙(guiding principles)¹⁾”에 안 맞을 경우 성공적 시민참여의 장애로 간주

1) Commitment(노력/의무), Rights(권리), Clarity(투명성), Time(시간), Objectivity(객관성), Resources(자원), Co-ordination(조정), Accountability(책임성), Evaluation(평가), Active citizenship(적극적 시민권) ⇒ 내용 설명(부록 참고)

① 지난 5년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원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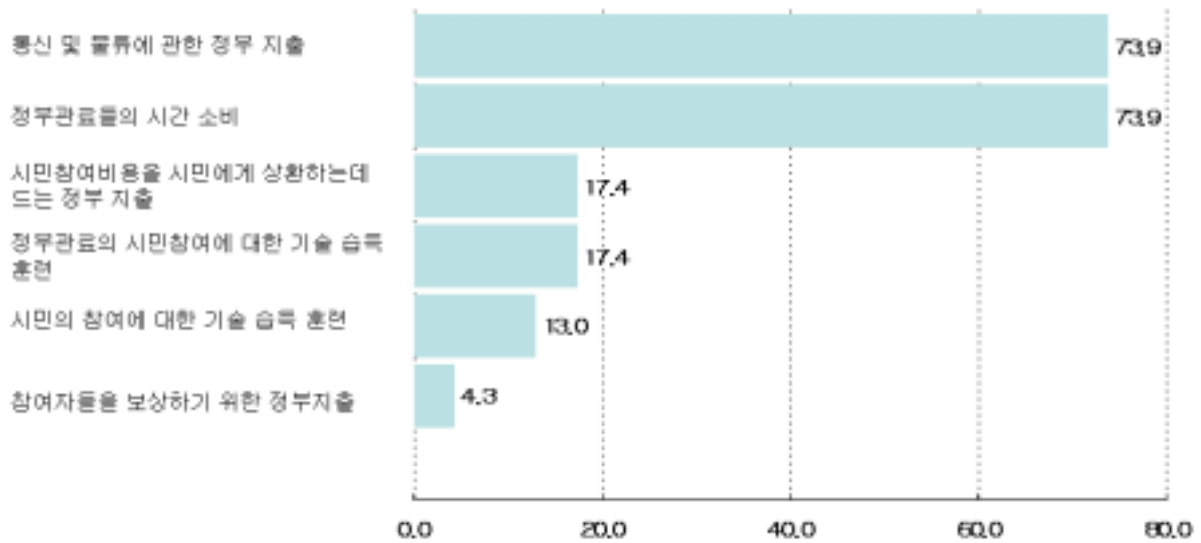
② 지난 5년간 가장 준수하기 어려웠던 원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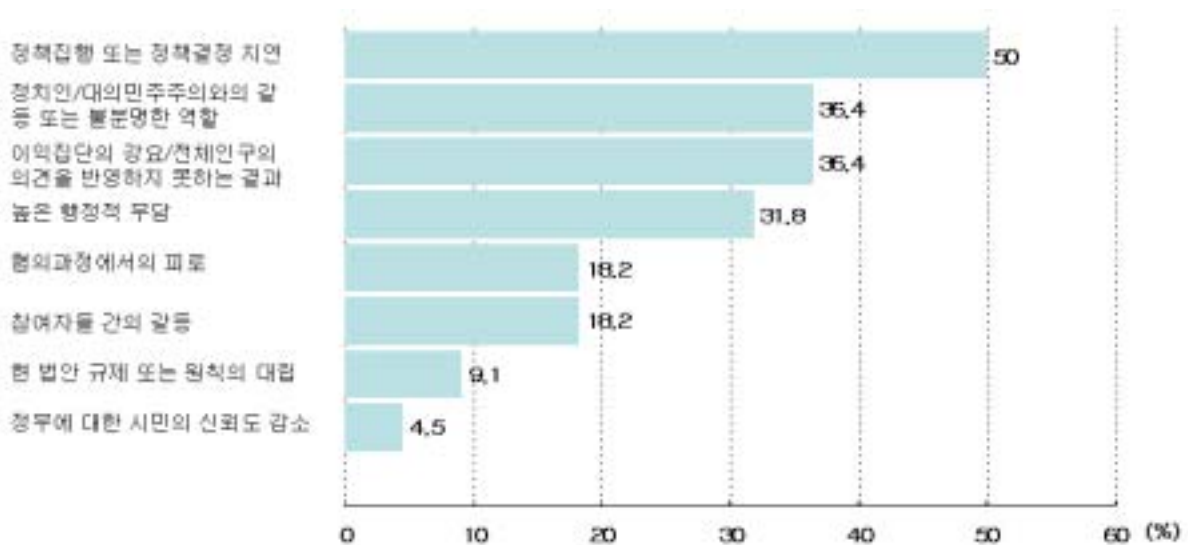
< 그래프 해석 >

- * 지난 5년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나라들 중 56.5%가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
- * 일부 국가들(26.15)은 높은 행정적, 정치적 차원의 노력/의무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다른 국가들(18.1%)은 준수하기 어려운 원칙이라고 주장

③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직접 비용



④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위험요소



< 그래프 해석 >

- * 공무원과 시민들의 기술습득 훈련을 비용으로 여기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훈련은 바람직한 시민참여과정에서 아주 중요함
- * 국가들의 1/3가량이 정책결정지연, 정치인들과의 갈등, 특별이익 집단에 의한 강요 등을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

③ 공개적에서 포괄적인 정책결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및 방법

○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음

- 잘 만들어진 공개적 정책결정과정도 모든 시민들, 심지어는 '평균적인' 시민들의 관심도 사지 못함

* 공개적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전형적인 참여자는 평균이상의 학력과 정치적 관심을 가진 40~50대 남성임

⇒ 정책과정이 포괄적(inclusive)으로 변하여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참여시켜야 함

* 참여하지 않는 집단 유형

-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참여할 수 없는 집단': 문화, 사회경제적 또는 물리적인 장애로 정책결정 참여가 어려움

-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를 원치 않는 집단': 정치에 대한 관심 및 동기 결여 등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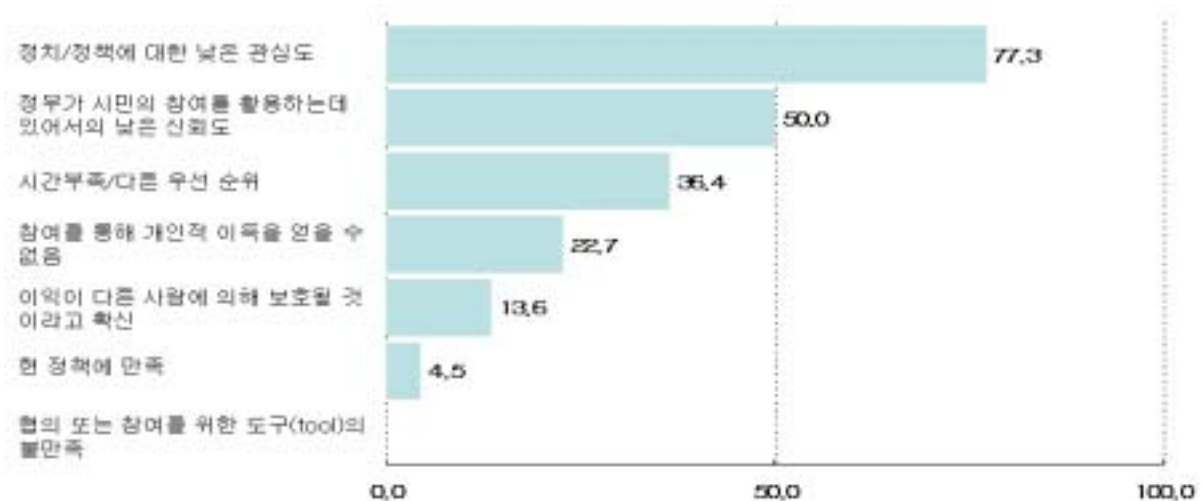
① 참여하기를 원하나 참여할 수 없는 집단 : 참여의 장애 요인



< 이들 집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보제공	협의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언어로 정보 제공(70.8%) · 간략한 정보 제공(70.8%) · 신뢰할 만한 매개체 사용(58.3%) · 큰 글자 정보 및 휠체어 접근용이성 제공(45.8%) · 기타 노력(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과목 초등교과 편입, 정보 신기술 사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글자 정보 및 휠체어 접근용이성 제공(75%) · 집 또는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기회 제공(75%) · 공개적 정책, 협의시간 마련 등(65%) · 특정집단을 위한 활동 제공(65%) · 신뢰할 만한 매개체 사용(55%) · 번역된 또는 여러 언어의 활동 제공(50%) · 정치와 정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제공(40%) · 자원(재정 포함) 제공(40%) 등

②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집단: 그 이유



< 이들 집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보제공	협의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장소(약국, TV 등)에서 정보 제공(68.2%) · 신뢰할 만한 매개체 사용(68.2%) · 편리한 포맷으로 정보 제공(63.6%) · 다른 서비스와 정보를 묶음(45.5%) · 기타 노력(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지원 및 비참여자에 대한 대폭 지원(47.8%) · 흥미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활동 설계(47.8%) · 시민이 참여기술을 습득하도록 참여방식 설계(26.1%) ·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26.1%) · 기타 노력(8.7%) · 참가자들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4.4%)

[부록]

성공적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및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에 대한 10대 원칙(guiding principles)

1. Commitment(노력/의무)

정책결정(policy-making)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협의 그리고 적극적 참여에 대한 리더십과 강력한 의무/노력이 정치인, 고위·일반관료 전 레벨에서 요구됨

2. Rights(권리)

정보에 접근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정책과정에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권리는 법 또는 제도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함

3. Clarity(투명성)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목표와 한계가 시작부터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시민과 정부 각각의 역할과 책무가 양자에게 분명해야 함

4. Time(시간)

협의와 적극적 참여는 가능한 한 정책과정의 초기단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함

5. Objectivity(객관성)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완결적이고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은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리 행사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6. Resources(자원)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적, 인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이 필요함

7. Co-ordination(조정)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류와 협의를 하는 이니셔티브가 전 정부에 걸쳐 조정되어야 함

8. Accountability(책임성)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용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9. Evaluation(평가)

정부는 정책결정의 변화하는 조건들과 새로운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 정보제공, 협의 등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10. Active citizenship(적극적 시민권)

정부는 적극적인 시민들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참여와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함